

표 문화전당 개관 2년 연기

랜드마크 논란·주차장·문화재 발굴 등 쟁점 겹쳐

실시설계 거쳐 내년 초 착공 2012년 상반기 완공

오는 2010년 5월 18일 개관키로 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건립 일정이 2년 더 늘어났다.

당초 기술적인 면보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겨냥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공사일정이 졸속적으로 잡힌데다, 랜드마크 논란·광주읍성 등 부지내 문화재 발굴 등이 겹치면서 준비에 차질을 빚어 공기 연기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은 10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일원 11만8천170㎡(3만5천평) 부지에 건립 중인 문화전당 공사 일정·총사업비 등을 재조정해 다음달 중순께 문화중심도시 종합 계획보고회에서 대통령께 종합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당초 오는 9월 28일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

었다.

하지만 전당 부지 내 광주읍성터 존치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문화전당 실시설계가 현재 30% 수준에 머물고 있고, 랜드마크 기능 보강·외부 주차장 확보·오페라 전용극장(전문 공연장) 건립 등의 쟁점도 아직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획단은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교통영향평가를 마치고, 9월 중순에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한 뒤 9월 말까지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11월 중에는 건축협약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은 이어 12월 중순에 공사발주를 의뢰한 뒤 내년 초에 착공해 2012년 상반기에 완공·개관한다는 목표다.

기획단 관계자는 "착공 후 50개월 동안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해야 4개월 간의 준비를

거쳐 2012년 상반기에 무사히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런 일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천년대계가 돼야 할 문화전당이 졸속으로 지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문화관광부가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약에서 "전당건립 일정을 당초 2010년 완공에서 2010년부터 단계적 완공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보고했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한데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구성차질·문화중심도시 추진 세력 간 갈등·랜드마크 논란 등에 가려 구체적인 후속 논의없이 '잠복'해 왔다.

문화관광부는 당시 아시아문화전당은 박물관 등 기존 장르별 문화시설처럼 정형화된 편만조나 사업 프로세스가 없어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2010년 5월 완공 계획은 사업 초기 정치적·이념적 필요에 의해 무리하게 결정된 감이 있다"며 "오는 17일과 22일 잇따라 열리는 종합계획안에 대한 서울, 광주 공청회에서 공기연장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법정 주차대수 395대 감면 문화전당 주차장 조례 개정 1천대분은 외곽 주차장에

광주시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해 아시아문화전당 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225㎡당 1대로 완화, 개정 전 913대의 법정주차 대수를 554대로 395대 감면해줄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문화전당 총 주차수요 1천675대 가운데 600여대를 부설 주차장에 수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당 준공시 까지 외곽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화전당은 교통이 혼잡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도심 진입차량을 억제키로 했다"며 "이렇게 하면 전당 주변을 문화 및 보행자 중심 거리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설

표 문화전당 개관 연기 절대 안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뼈아프고 있다. 문화중심도시의 핵심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 완공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연가될 것이라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등 사업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화전당은 5·18 30주년을 맞는 오는 2010년 5월18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달 28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화전당 부지 내 광주읍성터 존치 방안에 대한 문화재청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실시설계는 30% 선의 공정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도 랜드마크 기능 보강과 주차장 등의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전체적인 설계작업 역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은 문화전당 건립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추진단은 광주

시에 제출한 부설 주차장 확보방안에 문화전당 준공시기를 오는 2012년 상반기로 못박고 있어 연기를 기정사실화한 듯 하다.

문화전당 건립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하다. 건립일정이 연기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정권이 바뀔 경우 사업의 골격마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호남지역 주요 사업은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 이유로 일정 연기나 취소가 되풀이돼 왔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호남의 낙후를 불러온 것이다.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이런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추진 일정을 분명하게 밝히고 반드시 올 하반기 문화전당 착공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증시 폭락... 신용경색 사태 장기화되나

주식시장에 '검은 금요일'의 악몽이 되풀이됐다. 미국의 서브프라임(Subprime)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문제로 불거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세계증시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상환 불가능 사태가 유동성 위기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

10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80.19%포인트 하락한 1천828.49로 마감했다. 하루 낙폭이 사상 세번째로 컸고, 하락률은 3년2개월여만에 최고였다. 시장에서 하룻동안 증발된 돈이 39조6천억원에 달했다. 일본과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주식시장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금융거래 기록이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다. 저금리 기조에서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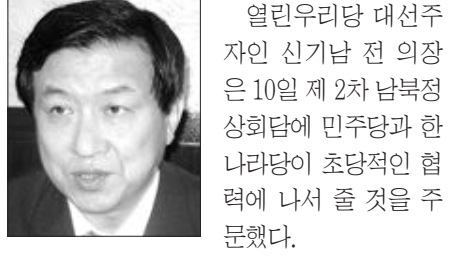
대출한 자금이 경기침체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부실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주택시장 침체에 그치지 않고, 전체 대출채권에 대한 신용불안과 위험자산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가 사회 등은 신용경색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고 일본과 싱가포르 등도 잇따라 자금을 수혈했다.

증시 주변에서는 우리의 증권시장이 그동안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점을 들어 과잉이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미국 금융시장의 변화는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자금의 유동성도 아직은 풍부하다. 주식 투자자들이 판단에 신중해야 하겠지만 금융당국도 경제 저금리 기조에서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민주·조순형 의원 등 정상회담 협력해야”

신기남, 10~11일 광주·전남 방문



열린우리당 대선주자인 신기남 전 의장은 10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신 전 의장은 이날 광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조순형 의원은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문제를 틀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독자 노선으로 갑작 인가를 누리려고 한다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으로 이번 대선에서 자신들이 불리할까 봐 불안해 한다"며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민에게서 정치적 능력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의장은 또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대통합을 주문하니 민주개혁세력이 신당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통합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 우리당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의장은 이날 광주지법 소년자원보호 자립회의 광주지회를 방문한 데 이어 순천과 여수를 찾아 순천 개인택시연합회, 여수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1일에는 목포상회의와 목포 공생원 등을 방문하는 등 '북지문화 회담찾기 전국대장정'을 이어간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駐 광주 중국영사사무소 개소식 주 광주 중국 영사사무소가 10일 남구 월산동에서 남부쿠이(南賦魁) 주한 중국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광주 중국영사사무소의 비자발급 업무 개시로 호남과 제주에서만 연간 20여만 명이 발급비용 60억~7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남북경협 필요자금, 향후 10년간 60조원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적지않은 재원이 필요하다. 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소요 재원이 향후 10년간 수십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한 자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얼마나 필요한가=현재로서는 남북경협에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일지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통일부가 작년에 작성한 '북한이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경제협력사업' 문건에 따르면 비용이 많게는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전기송전, 발전설비, 송전선 개보수, 무연탄 설비지원, 중유지원 등 에너지 분야에 1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개성~평산, 온정리~원산 철도복구, 남북연결철도 전철화,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남포항 시설 현대화, 물류체계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적어도 수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시베리아 철도, 가스전사업, 제2

의 개성공단 등에 대한 합의가 나올 수 있으며 전혀 예상 밖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발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재원은 큰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SOC 14조원, 개성공단 13조6천억원, 금강산관광사업 2조원, 에너지지원 10조원, 북한산업 정상화 20조원 등 향후 10년간 60조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원확보 쉽지 않다=문제는 재원확보 방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는 북한 관련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짜여진다. 이 기금의 올해 사업비는 8천723억원이었고 통일부가 요구한 내년도 사업비는 1조3천억원이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인 만큼 회담결과에 따라

서는 필요재원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북협력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이에 따라 재원 확보 방안으로 통일세 신설, 채권 발행, 군사비의 전환, 복권 발행, 별도의 기금 신설, 국제적 원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험 재원은 궁극적으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

◇핵 완전 폐기돼야 국제적 지원 가능=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 자원에 필요한 재원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통한 투자나 지원의 길을 여는 것은 결국 향후 북한의 실질적 핵 폐기 절차 완료 여부에 달려있다. 이들 국제금융기관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미국과 일본이고, 이들은 완전한 핵 폐기가 지원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盧대통령, DJ 만나 조언 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8월28~3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조만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조언'을 구할 전망이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6월13일부터 15일까지 53시간동안 평양에 체류하면서 김정일 위원장과 얼굴을 맞댄 시간만 무려 10시간 가량이란다.

노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회동이 이뤄질 경우 이 자리는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조언 구하기'라는 실무적 성격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대면협상 전 인질 살해 안한다”

탈레반 “수감자 8명 석방이 우선” 피랍자 가족, 다음주 두바이 방문

한국의 인질 21명을 억류하고 있는 탈레반 무장세력은 아프간 정부에 전달한 탈레반 수감자 8명의 석방이 향후 모든 협상의 변하지 않는 선결조건이라고 밝힌 협상 담당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러나 한국 정부 대표단과 대면 협상을 하기 전에는 인질 중 어느 누구도 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피랍자 가족들은 아랍권 여론에 인질 석방을 호소하기 위해 오는 13일 두바이를 방문하기로 했다.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다리는 9일 연합뉴스와 간접 통화에서 "감옥에 있는 탈레반 8명을 인질과 맞교환한다는 우리의 요구는 변하지 않았다"며 "8명을 먼저 석방하면 여성인질과 탈레반을 둘다가 수감된 아프간 여성의 1대 1 교환안도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탈레반의 지도자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같은 요구는 납치 초기에 수감된 탈레반 조직원 29명을 인질과 맞바꾸자는 제안에 비해 유연해졌긴 하지만 아프간 정부가 '단 1명이라도 수감자 교환을 안 된다'는 입장인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머무를 전망이다.

인질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그는 "약을 처방해 날마다 좋아지고 있으며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태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마다리는 또 AP 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한국 대표단과 대면협상을 할 때까지는 한국의 인질을 살해할 계획이 없다"면서 "현재 협상 장소를 놓고 전화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마다리는 이어 한국 정부가 아프간에서 활동 중인 구호요원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린 것이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 정부와 탈레반은 인질 석방을 위한 대면협상을 갖기로 하고서도 보안상의 문제로 대면협상 장소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질 석방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던 '평화 지르가'(Peace Jirga)가 9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개막됐지만 원론만 반복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11일 페막되는 이번 지르가는 페르데즈 무사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물론, 탈레반과 친탈레반 부족장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피랍자 가족모임 차성민 대표는 10일 "아랍권 여론에 인질 석방을 호소하기 위해 두바이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春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시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취재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취재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저경가 unipark@kwangju.co.kr